

무엇이 ‘진짜 이재명’인가

태평로

최재혁

정치부장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전략은 보수와 일전(一戰)을 벌일 이슈는 만들지 않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굳이 큰 전선(戰線)을 형성해 선거 구도의 변수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차원이다.

이 후보 10대 공약을 보면 북핵이나 대미(對美), 대일(對日) 관계도 원론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모호성을 유지한다. 기업·부동산·노동 공약도 각론에서 일부 예외는 있지만 비슷한 기조다. 이 전략에는 이 후보가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쥐면 그의 숨겨진 ‘좌파 본성’과 ‘반(反)기업 성향’이 거침없이 표출될 것이라는 우려,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를 희석시키려는 측면도 있다.

최근 여기에 변화가 생겼다. ‘사법 개혁’으로 치장된 ‘조희대 대법원 공격’과 ‘이재명 면죄부 법안 추진’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제3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후보 처벌의 근거 조항을 없애는 선거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장악한 행안위와 법사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장차 면소(免訴)를 통해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모두 삼권분립과 사법 체계의 균간을 흔드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가 받고 있는 재판 5개를 모두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회부돼 있다.

민주당은 집권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을 곧바로 해치울 태세다. 대선 투표에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다. 이 후보 숙원인 ‘사법 리스크 해소’도 여수선한 대선 과정에 얹혀갈 이 해결되는 셈이다. 정치 권력이 사법부를 발아래에 두는 이런 일이 장차 어떤 후과(後果)를 낳을지에 대한 근본

실용과 공격성, 兩面의 李 大法 선거법 파기환송 “내란” 규정, 직접 공격 ‘이재명 포비아’ 상기시켜

적 성찰과 논쟁이 필요하지만 지금 우파에는 그럴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재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존’이라고 측근들은 얘기한다. 그는 인생 대부분을 비주류로 살았다. 이 후보를 오래 알았던 사람들은 그의 거친 언사와 선동적 기질에 대해 “이재명은 그저 생존을 위해 전력을 다해 왔다”고 한다.

이 후보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 즉각 반응했다.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 목적을 달성하려 했고 성공했다. 지난 대선을 0.73%포인트 차로 지고 난 뒤 측근은 ‘외국에 나가 있는 게 어떻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인천

계약을 보궐선거에 출마해 원내로 들어갔다. 당대표까지 거머쥔 뒤 ‘비명횡사’ 공천을 통해 일극(一極) 체제를 만들었다. 탄핵소추안을 31번 발의하고 감액 예산 처리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뺏어버리는 등 윤석열 정부를 거칠고 집요하게 압박했다. 이를 진두지휘할 때 이 후보가 보이곤 했던 독한 눈빛을 많은 이가 기억한다.

다른 평가도 있다. 그들은 이재명의 본질을 ‘실용’이라고 했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거친 이 후보에게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행정가의 면모가 있는 것이다. 그를 만나본 기업인들도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고 유연하다”고 한다. ‘연구·개발 업종 주 52시간 예외’의 법제화 같은 문제도 자신의 성과에 도움이 된다면 집권 후에도 해결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재명 포비아’의 본질은 생존(공격성)과 실용(유연성) 사이에서 어느 쪽이 ‘진짜 이재명’인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번엔 대법원이 자신의 ‘생존’ (대선 후보 자격)을 위협했다고 보는 것 같다. 사법부 공격에도 직접 나섰다.

‘삼권분립 훼손’으로 이어지는 사법부 흔들기는 큰 후유증을 남길 문제다. 하지만 “대법관은 탄핵소추되면 일어서 그만둘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일부 의원만 있을 뿐, 위험성을 지적하는 사람은 잘 안 보인다.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순 없지만, 만약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벌어질 일을 미리 보는 느낌이다.

개혁·개방 이후 대도시로 인구가 빠르게 집중되면서 중국의 ‘속인사회’는 설 자리가 픽 좁아졌다. 아는 사람보다 낯선 사람을 많이 만나는 현대 도시의 삶은 그런 전통적 ‘관사’ 중심의 중국인 사회를 일찌감치 흔들었다.

그러나 요즘은 새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고 한다. 대도시 젊은이들이 가혹한 경쟁을 피해 전통적 ‘속인사회’의 습속이 남아 있는 고향, 또는 그 인근의 작은 도시 현성(縣城)으로 회귀하는 일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비난 도시 물가, 구직난(求職難), 나아진 인터넷 환경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그러나 개혁·개방의 퇴조가 부른 중국 사회의 움츠러들고 말려드는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보인다. 새 버전의 이 ‘귀거래사(歸去來辭)’는 중국의 축복일까 재앙일까.

중국인문경영연구소 소장



김성규

이다. 혈연과 지연을 먼저 내세우니 인정(人情)이 발달하고 ‘관사’에 함몰한다.

“우리가 남인가”라는 의식이 앞서니 부패가 만연하지 않을 수 없고, 인정과 체면을 강조하니 규범과 규칙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다. 법규가 맥을 못 취 결국 사회 흐름은 법치(法治)가 아니라 인치(人治)로 기울 가능성이 훨씬 크다.

社説

“이공계 상위권 1000명씩 뽑아 초인재로 길러내자”

서울대 공대 학장이 “이공계 대학생 중 매년 1000명을 뽑아 집중 지원해 초인재로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엘리트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해 매년 대학에 입학하는 이공계 학생 10만명 중 최상위 1%를 선발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국가 인재로 키우자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은 우수한 인력이 뒷받침했기에 가능했지만 이제 과학기술 분야에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학에 입학하는 18세 인구가 30년 사이 절반 이하로 줄어 인력의 양적 확보도 어려워진 데다, 더 심각한 것은 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대신 의대로 쏠리는 현상이다. 지난해 서울대 신입생 850여명 중 130명가량이 등록을 포기했다. 특히 의대와 관련 있는 바이오 분야 학과의 경우 넷 중 하나꼴로 입학을 포기했다.

지금 대선 주자들이 ‘100조원 투자’ 등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육성책을 내놓고 있지만 AI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지금 같은 상황에선 실현하기 힘든 공약이다. 한국의 AI 종합 국가 순위는 7위이지만 인재 순위는 28위에 불과하다. 어렵게 키운 이공계 인재도 국내를 떠나 해외 빅테크 기업으로 발길을 돌린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서 한국은 인도·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셋째의 AI 인재 순수출국이 됐다. 이대로면 첨단 산업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영남 자민련’도 못 될 처지의 국힘

국민의힘 김용태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첫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정중하게 탈당을 권고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만나 당과 대선 승리를 위한 결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에서 (탄핵 등) 위한 판단을 받은 당원은 당적을 3년 정도 제한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선이 본격화했는데도 국힘이 반전 계기를 못 만드는 것은 윤 전 대통령 문제도 한 원인이다. 당 안팎의 자진 탈당 요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김문수 후보에게 맡기겠다”고 공을 떠넘겼다. 그러자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라고 또 공을 떠넘겼다. 국힘은 윤 전 대통령과 관계 정리를 해야 조금이라도 중도층 지지를 기대할 수 있는데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계엄 사태에 대해선 거듭 사과하면서도 현재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선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그런데 현재 전원일치 파면 결정을 ‘수용한 다’는 국민 여론이 60~70%였다. 국민이 공산당인가, 국힘은 중앙선대위 상임고문단에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당장 오는 2027년까지 AI·빅데이터·클라우드·나노 등 4대 신기술 분야에서 6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분야에서 초·중급 인력은 수요(4만4600명)보다 3800명 더 공급되지 만 R&D(연구개발)에 투입할 고급 인력은 수요(2만1500명)의 23%만 배출돼 1만6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빅데이터 분야 고급 인력 역시 3만명이 필요한데 20%(6100명)만 배출될 전망이다.

중국이 AI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미국과 격차를 좁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 인재를 초등학교 때부터 선발해 집중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전 세계 AI 전문가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대만도 국가 차원에서 AI 인재를 길러낸 덕에 관련 기업들이 성장해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2021년부터 주요 대학에 AI연구센터를 설치해 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기고 있다.

과학기술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당장 대입 제도를 바꾸거나 의대 편중 현상을 변화시키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매년 이공계에서 상위 1000명을 선발해 과학적인 대우를 해주고 집중적이고 창의적 교육을 시켜서 과학기술 엘리트로 키워내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전사령관이던 정호용 전 국방장관을 고문으로 위촉했다가 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5·18을 고요에 두고 이런 촌극을 벌일 수 있다. 국힘 내부가 정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반전은 고사하고 그나마 있던 중도 지지층의 외면만 자초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TK)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30%를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대선 때보다 8%포인트쯤 높다. 국힘이 뒷받까지 위협받는 것은 그동안 수도권·중도·젊은 층 표를 잃으며 영남 기득권과 강성 지지층에 안주해온 결과다. 최근 10년 민주당이 수도권을 장악하는 동안 국힘은 ‘영남 자민련’으로 쪼그라들었다. 국힘 지역구 의원의 65%가 영남권이다. 이들은 국민 다수의 민심이 아니라 강성 지지층 눈치만 보는 정치 웰빙족이 됐다. 어처구니없는 계엄도 반대하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한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 약속을 뒤집고 버텨서 후보가 됐는데 그 후엔 보여주는 것 없이 자충수만 거듭하고 있다. 애초에 당선인 아니라 후보가 목표였다. 이대로면 국힘은 ‘영남 자민련’도 되지 못할 것이다.

북핵 언급 앓는 李 후보 진짜 안보관은 뭔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에서 동북아평화협력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락 의원이 “언론에서 세세 발언만 또다시 부각해 안타깝다”고 했다. 중국에도 ‘세세’, 대만에도 ‘세세’하자는 이 후보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4강과 관계를 잘 유지하자는 게 핵심”이란 것이다. 주변 국가와 두루 잘 지내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문제는 북핵과 양안 관계 등 이해관계가 서로 반대인 사안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민은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 핵심 안보 문제에 어떤 입장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 후보는 선거가 시작된 이후 구체적 내용 없이 ‘세세’와 같은 말만 해왔다.

이 후보 공약 중엔 ‘북한 핵 위험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목표 아래 남북 관계 복원’, ‘한미 동맹 기반하 전사전전권 환수

추진’ 등의 내용이 있다. 좋은 말은 다 들어있지만 이 후보는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속마음을 말했다가 선거판에서 논란이 될까 봐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거판 이전에 이 후보는 외교·안보 문제에 ‘놀라운’ 언급을 많이 해왔다.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패착”이라고 했다. 2022년 10월엔 한·미·일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했고, 그해 2월 대선 유세 때는 “사드 같은 흉악한 무기가 아닌 보일러를 놓아드리겠다”고 말했다. 불과 몇 년 전엔 미군을 “미 접령군”이라 표현했고, (일본) 자위대의 군화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힐 수도 있다”고 했었다. 모두 황당한 내용들이지만 지금도 같은 생각인지 말을 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다.

둘 다 같이 안했다고 박정희가 「나쁜 사람」?

newdaily.co.kr 뉴데일리

산업화·민주화 동시에 가능하다고? 고속도로 공사장에 벌렁 누웠는데 ...

《민주화/산업화 병행론》은 몽상·말장난 YS-DJ의 무조건 반대가 박정희 권위주의 초래 동일선상 줄 탄핵이 계엄 탄핵 유도



로써 권위주의 통치를 초래했다. 출탄해이 계엄을 유도한 것도 동일선상이다. © 뉴데일리

◀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 불도저 앞에 벌렁 드러누운 반대자들. 당시 YS와 DJ를 비롯한 당 전원과 관영 언론을 제외한 모든 언론은 반대했다. 조선당정 DNA가 이식된 듯 박정희 산업화 정책에 무조건 반대함은

산업화 vs. 민주화, 관점 충돌

식민지를 겪은 국가들, 후진국 및 개발도상국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문제는 순서다. ① 산업화→민주화 ② 민주화→산업화 ③ 산업화·민주화 병행

이 지구상에 ②와 ③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로서 ①만

이 유일하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최근, ③도 가능하다는 ①을 비판하는 관점이 대두됐다. ①과 ③의 관점이 충돌하는 것이다.

두 개의 적대적 역사관 80년

이 두 개의 적대적인 역사관은 정치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반도인들 전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혈전을 벌인지 80년. 앞으로도 이 상극은 연구회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은 1945년 8.15해방 공강에서 비롯했다. ※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노선》이나, 그 반대냐? ※ 6.25 남침이나, 그 반대냐? ※ 박정희의 《권위주의적 산업화》냐, 그 반대냐? ※ 박근혜-윤석열 탄핵 반대냐, 찬성이나?

일부 먹물들은 말한다. ▼ 이승만 건국 노선은 《분단 고착》. ▼ 6.25는 《북침》. ▼ 박정희 산업화는 《신(新) 식민지 종속화》. ▼ 박근혜는 최서원의 《경제공동체》, 윤석열은 《내란 수괴》.

이래서 한반도와 한국 안의 내전(內戰)은 예나 이제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자유대한민국 《만세》냐, 《타도》냐의 첨예한 흑·백 대결.

먹물들의 각설이 타령

일부 정치인-언론-먹물들은 또 말한다. 그들 다 아닌, **중간으로 가야 한다**, 또는 **둘 다 동시에 해야 한다** 어찌고

중간? 병행?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중간》이란 뭔가? 6.25 남침 와중에 《중간》이 있냐?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 《중간》이 있냐? 《박정희 산업화》 말고 어떤 산업화를 말하는가?

산업화-민주화를 《동시》에?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말대로 되냐? 말로야 된들 못하겠냐? 세치 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처럼 쉬운 일도 없다.

6.25 남침 앞에서 “중립합시다” 소리치면 그게 되었을까?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해 《현장에 벌렁 누는 게》 더 좋은 대안이었냐? 《포항제철-현대자동차에 반대한 게》 더 좋은 대안이었냐? 《대기업 위주 아닌 중소기업 위주》로 했더라면 반도체가 가능했을까?

누가 대한민국 위대하게 만들었나

응답하라. 무엇이 대한민국을 10위권 선진국으로 끌어올렸냐? 그것을 불러온 《이승만-박정희를 깎아내리는 게》 진보인가? 《사진평-푸틴-김정은을 비판해야》 진보이지!

그런 진보는 《가짜 진보》다. 그것을 《화 썰어버려야 한다》는 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국민 일반은 어찌 생각하는가? 둘 중 어느 게 《진짜 진보》라고 생각하는가? 대한민국 77년사는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역사》였다. 《나쁜 사람》들이 만든 《나쁜 역사》였나?

류근일

뉴데일리는설교문 / 전 조선일보 주필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www.newdaily.co.kr) 합참으로 2025년 5월 14일 게재 되었습니다.



NO. 155 뉴데일리 칼럼 프린트 버전 시리즈

뉴데일리 콘텐츠를 지원해주세요

뉴데일리를 아껴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7-880570 뉴데일리(주)